

I. 개요

- 2010년 10월 14일(목)~15일(금) 당지에서 제62차 OECD 경제정책위원회(Economic Policy Committee) 실무작업반회의(WP1)가 개최되어,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제, 구조개혁정책이 저축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, 거시경제 위험 분담 방안, 주택시장 정책 등을 논의한 바 주요 회의결과를 보고함
(기획재정부 최훈 자금시장과장, 조성중 경제분석과 사무관, 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 부연구위원, OECD 대표부 서원석 주재관 등 참석)

II. 주요 논의 내용

1.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제

- OECD 사무국은 각국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
 -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 상품시장 규제 완화·교육 개혁을 통한 인적자본 개발·산학연계 및 R&D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유도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, 노동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사회보장제도 및 근로소득세제 개편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·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
 -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정책 추진이 소득 증대를 통한 세수 확대로 재정건전성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
- 일부 대표들은 구조개혁과제 우선순위의 적절성과 시의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
 - 미국, 스위스, 뉴질랜드 대표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과 인적자본 개발 정책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
 - 반면 호주, 브라질, 인도 대표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특징에 맞는 구조개혁 과제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

- 노동시장 및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정책 처방이 달라져야 하며,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혁신이나 인적 자본 개발보다 노동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
- 프랑스, 스페인 대표 등은 OECD의 구조개혁과제 권고가 매년 비슷하여 금융위기 등 최근의 상황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
- 스웨덴 대표는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권고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으며, 헝가리 대표는 금융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
- 벨기에, 노르웨이 대표들은 발전의 지표로 1인당 GDP를 사용함에 따른 한계를 지적하며 성장을 위한 OECD의 정책권고가 소득분배, 환경보호 등의 목표와는 상충될 수 있다고 언급

2. 구조개혁정책이 저축·투자에 미치는 영향

- 사회보장시스템·노동시장·상품시장·금융시장·조세 등과 관련된 구조개혁 정책이 저축·투자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
- 일본 대표는 기조 발표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국이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저축보다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,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대외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
- 이탈리아, 프랑스 대표 등은 개별 국가의 실정에 맞는 구조개혁을 통해 대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
- 경상수지 흑자국의 경우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관련 지출을 증가시켜 민간저축률 하락을 유도하고 서비스부문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
- 뉴질랜드 대표는 경상수지 적자국의 경우 정부저축을 증가시키거나, 높은 자본 이용비용을 부과하여 투자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

- 호주, 포르투갈 대표들은 환율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대외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나 구조개혁을 통해 대외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언급
- 한편 미국 대표는 아시아 신흥개도국들의 높은 저축률과 이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가 글로벌 임밸런스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적정수준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
- 이에 대해 인도 대표는 높은 저축률은 문화적 특성, 선진국에 비해 낮은 사회보장수준, 인구구조에 기인하고 있음을 설명하고, 국가별로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논의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주장
- 구조개혁정책이 저축,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
- 독일, 오스트리아 대표들은 금융위기 이후 구조개혁이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위기 이전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지적
 - 과거에 비해 경제주체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심화되고 있고,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져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
- 프랑스, 스위스 대표들은 금번 분석결과가 기존의 분석결과에 비해 구조개혁이 대외불균형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
- 아울러 개별경제주체의 소비 행태를 변화시키는 조세개혁정책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

3. 거시경제의 위험요인분담

-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을 어떻게 사전에 분담할 것인지 국가간 위험분담 기제와 국가내 개인간 위험분담 기제로 나누어 논의
- 대부분의 대표들이 동 논의가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임에 동의하였으나 효율적인 위험분담 기제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
- 헝가리 대표는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국가간 위험분담기제를 마련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

- 미국 대표는 위험분담을 위한 보험시장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 등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
- 독일 대표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위험분담 기제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
- 통화동맹이 경제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혹은 경제충격을 전염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
 - EU 대표는 경제충격의 규모가 작고 발생빈도가 낮다면 통화동맹은 경제충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
 - 호주 대표는 통화동맹이 개별 회원국의 통화정책수단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충격을 오히려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
- 한편, 거시경제 충격이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
 - 인도 대표는 환율 절상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자국의 경우 환율 절상에 따른 소득 감소 효과가 중산층 이하에 더 크게 나타나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
 - 일본 대표는 거시경제충격을 경기순환과 관련된 충격(cyclical shocks)과 이와 무관한 충격(non-cyclical shocks)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

4. 주택시장 정책

- OECD 사무국은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금융 부문의 불안을 초래하여 거시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, 원활한 주택 거래가 제한되어 노동이동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
 - 아울러 주택시장은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수요 변화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, 토지 이용 규제 완화·공급자간 경쟁 촉진 등 공급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
- 각국 대표들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측면 정책의 중요성에 대체로 공감

- 아국 대표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거시건전성을 확보해 온 사례로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였음. 한국 정부는 LTV, DTI 등 거시건전성 조치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 환경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한 주택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, 저렴한 택지 공급을 통해 주택 분양가격을 낮추면서 주거 및 교육환경 측면에서 우수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추진중임을 언급
- 프랑스 대표는 지방 정부들의 엄격한 토지 개발 규제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
- 포르투갈 대표는 과거 강력한 임대료 규제 정책으로 임대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한 반면 임대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탄력적인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
- 다만, 호주 대표는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
- 오스트리아, 노르웨이 대표는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대출 증가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금융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
- 일부 대표들은 주택 보유가 다른 형태의 투자에 비해 조세 부담이 덜한 측면이 있다면서, 이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작용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
- 특히 캐나다 대표는 자가 보유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일 확률이 높으므로 자가 보유에 우호적인 조세제도는 효율성 상실과 함께 소득분배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
- 한편, 벨기에 대표는 자가 보유자의 경우 지역 공동체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투자에 비해 우대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

III. 관찰 및 평가

- 각국 대표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였으나,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정책 추진 여건이 달라 일부 이견이 존재하였으며, 특히 글로벌 임밸런스 해소와 관련하여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간의 시각차가 표출되었음

- 글로벌 임밸런스 해소가 회의의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표는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였으며, 프랑스·이탈리아 대표 등도 글로벌 임밸런스 해소에 아시아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모습
 - 반면, 금번 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한 BRICs 국가 대표들은 국내적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임밸런스 해소에 관한 주요 선진국의 시각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등 현저한 시각차를 보여주었음
 - 동 이슈는 G-20 정상회의 등 향후 국제 논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가들간의 견해차이로 쟁점화될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예상되며,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시 의장국으로서 논의 방향과 범위를 최대한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국가들간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아울러 금번 회의는 보험시장 정책을 통한 위험분산 방안,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나타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
- 다만,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OECD는 물론 다양한 국제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